

# 차당선인-여야대표, 北 핵실험 즉각 중단 촉구

## 국정 논의 여야 협의체 구성키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7일 북한이 핵 실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로가 국정 논의의 동등한 자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 핵 관련 3자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 측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위기 상황일수록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하기 전에 여야 한 목소리로 북한이 즉각 핵 실험을 중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때"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북한이 핵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유엔,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고 북한은 더욱 고립을 초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더도 덜도 없이 생각이 똑같다"고 동의한 뒤 "안보는 여야가 일치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이 오만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핵 실험은 종래와 동북아 정세와 평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위중할 수 있어 충분히 논의한 끝에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북 핵 3자회담 결과 발표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최근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위협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긴급 3자회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3자는 아울러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

하는 한편, "북한이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함께 추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자는 국정동반자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상호간 협력한다"고 다짐했으며 이를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 여야 간의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통합·복지·고용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통합'과 '복지', '고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설 연휴(9~11일)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는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이날 중순에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 아래 국정과제를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정과제에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민생과 직접 연관된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행복'을 최고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국민대통합 ▲한국형 복지국가 ▲중산층 70%·고용률 70% 등을 국정지표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대기업 성장동력 투자, 골목상권 보호, 유통구조 개선, 중소기업 육성, 여성인력 사회진출 확대, 평생직업 능력 개발제도, 기초연금 도입,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공약은 정책 취지를 살펴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일부 공약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우선순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식 국정과제 나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국정과제 숫자도 100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목표와 국정과제를 담은 '백서'발간 작업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발간팀을 꾸려 인수위의 주요 활동 결과 등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동흡 표결 부결땐 새누리 큰 타격"

### 김성태 의원 부정적 입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7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표결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중민인이다'에 출연해 "표결이 강행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표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지난번에는 '특정업무경비로 콩나물 사면 안 되지'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분이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집권당 대표로서 할 도리가 아닌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실시 후 국회 표결'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박 당선인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국회가 할 도리를 해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 후보자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주장한 데 대해 "참담하고 갑갑한 심정"이라며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검증 받고 명예를 지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놓고 스스로 인사청문회의 희생양처럼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오늘 '박근혜 정부' 첫 인선 발표

### 총리·靑 비서실장 포함 관측

####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로

박근혜 정부의 첫 인선이 8일 오전 10시 발표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5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이 인선은 무효화됐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일(8일) 오전 10시 주요 인선에 관한 1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차례의 발표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나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등이 공표될 것으로 관측되나 윤 대변인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

았다.

이번 발표에서의 인선 폭은 물론 이로써 조각(細綱)과 청와대 비서진 구성이 완료되는지, 추가 발표가 있을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1차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고 끝난 것이고,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2차) 발표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선이 예정보다 늦어지면 새 정부의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차질은 결코 빚어지지 않고 있고, 빚어질 가능성도 없다"며 "애초 구상했던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는 25일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적이 일반적이다. 여당의 한 인사는 이날 "총리는 여야가 26일 무조건 표결한다고 합의해놨으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17명이나 각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도 인사청문에 10일~15일이 걸린다"면서 "야당이 '검증할 시간이 없으니 조금 더 해야겠다'고 나와도 박 당선인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의 청와대 대조각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는 유력후보군이 각종 결함으로 탈락하는가 하면 일부는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사청문회 통과가 유력한 인사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조각 대상자들에 대한 국회의 검증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인선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개성공단 건드리면 군사지역 만들것"

### 北, 통일부 대북 반출물품 검색강화 강력 반발

개성공단 등의 대북 반출물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이리 저리 더 해야겠다"고 나와도 박 당선인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내각 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북한)는 6·15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로든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협은 2004년 7월 북한의 대남 경험기관들을 통합해 내각 산하성(장관)급 기구로 출범했다. 민경협은 산하에 남북교역 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

련)와 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을 두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북한에) 부과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협은 "개성공단은 역사적인 6·15 통일시대의 산물로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극도의 침예한 최전연(최전선) 지역을 통째로 남측에 내주어 건설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라며 "우리가 개성공단을 내준 것은 남조선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에 대한 동포애의 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림은 고향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평소 찾아 밟지 못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계사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에 밝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즉석 프리미엄부패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